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요건은 왜 설계사 생계인가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영업 중단의 연쇄피해를 줄이지만 인정 기준과 산정 방식은 하위규정에 남겼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통과 발표, 현행 보험업법의 업무정지 구조와 2025년 판매채널 개혁안을 대조했습니다. 개정안과 시행 중인 법을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9.01	연번	2026_79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1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조항을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제재의 전달 경로를 바꾸는 장치로 본다. 업무정지는 법인뿐 아니라 위반과 무관한 설계사의 모집소득까지 멈추지만 과징금은 영업을 계속시키고 금전 부담을 법인에 남긴다. 다만 '생계보장 필요'와 과징금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같은 위반에 왜 정지와 과징금이 갈렸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할 때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근거를 뒀습니다. 아직 공포·시행된 현행 규정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모집인의 결격·등록취소 범위를 넓히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며,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근거를 새로 둡니다.

국회 통과	2026.8.20	공포·시행과 구분
대상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정지 갈음
갈음 요건	설계사 생계보장 필요	금융위원회 발표문
GA 임원 제척	3년→5년	관련 법률 위반
청문 생략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확정판결 등
시행 예정	공포 후 6개월	하위규정 정비

금융위원회 발표문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나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금융관계법률의 범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에 한정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법 등으로 넓힙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확인된 공식 단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보험모집 영업을 멈춥니다. 법인에 대한 제재지만 그 법인에 속한 설계사도 새 계약을 모집하지 못해 수입이 끊길 수 있습니다. 2025년 보험개혁회의도 위반하지 않은 설계사까지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과징금 도입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과징금으로 같음하면 영업은 계속되고 금전 부담이 대리점·중개사에 남습니다. 제재의 수단이 '시간 동안 못 팔게 하는 것'에서 '돈을 내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소비자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회사와 기존 보험계약 자체가 이 선택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음은 자동이 아닙니다. 발표문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설계사 수, 소득 의존도, 위반 관여 여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는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것과 당장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포일, 시행일과 대통령령·감독규정이 갖춰져야 실제 사건에서 선택 기준과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소속 설계사는 업무정지의 간접 피해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특히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모집소득 의존도가 높은 설계사일수록 정지 기간의 손실이 큼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차이가 큼니다. 업무정지라면 해당 채널에서 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과징금이면 모집이 계속됩니다. 제재 사실과 같음 이유가 공개되지 않으면 고객은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회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의 처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영업시간을 제한	설계사 소득도 중단 가능
같음 과징금	영업 계속+금전 부담	법인에 부과
GA 임원 제척	2년 연장	3년에서 5년
시행 간격	공포 후 6개월	통과일과 다름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생계 기준

생계보장 필요를 설계사 수·평균소득·위반 관여 여부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2 · 산정 방식

과징금의 기본금액, 가중·감경과 업무정지 일수의 환산 방식은 하위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3 · 소비자 요소

같은 판단에서 피해 계약자 수와 손해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발표문에 없습니다.

04 · 공표 범위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한 이유와 비교 가능한 처분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보험증권과 청약서에서 보험회사, 모집 설계사와 소속 대리점 이름을 따로 확인합니다.
-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설계사 소속·제재이력과 법인보험대리점 정보를 조회합니다.
- 대리점이 제재받았다는 안내를 받으면 보험료 납부·계약 변경·보험금 청구 창구를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 대리점 처분 때 기존 계약 관리와 보험금 청구 창구를 고객에게 직접 안내합니다.
- 같은 과징금을 신청하거나 의견을 낼 때 위반과 무관한 설계사의 범위와 생계자료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당국

- 생계보장 필요의 판단요소, 과징금 산정식과 소비자 피해의 가중요소를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처분 공표에 업무정지를 같은 이유와 설계사·계약자 보호조치를 함께 밝힙니다.

갈림길**과징금 기준에 소비자 피해가 들어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행령·감독규정의 생계 인정 기준과 과징금 산정식

A

판단요소를 공개한다

같은 위반에서 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갈렸는지 설계사·소비자 모두 검증할 수 있습니다.

B

재량만 남긴다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과징금이 영업 계속 비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공표 뒤 입법예고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의 산정표·공표 항목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3개의 연결 지식**

제도와 규칙 보험설계사 규율 ↗

피해 구제 보험 모집 분쟁 ↗

넥서스 브리프 GA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한도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보험업법 개정안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보도자료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2	1차 · 소속 보험설계사 생계보장 필요 시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같음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개정안 주요내용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3	1차 · GA 임원 제척기간 3년에서 5년, 객관적 입증 시 청문 생략, 보고의무 신설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4	1차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 같은 금융위원회 향후계획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5	1차 · 일부 설계사 위법으로 선량한 다른 설계사까지 영업 제한되는 문제와 대체 과징금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제6차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6	1차 ·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취소·업무정지 체계 보험업법 제88조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보험업법 공포일과 시행일, 시행령·감독규정의 생계 인정 기준, 과징금 산정식과 소비자 피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2026년 9월 1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로 표기했으며 공포·시행된 현행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명을 분석한 것입니다. 공포·시행 및 하위규정 확정 전에는 실제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보험계약이나 제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